2014年 하반기 國政운영 관련 제언

1. 상반기 國政운영 평가 및 하반기 의미

2. 분야별 國政환경 진단

3. 國政운영 관련 제언

붙 임 : 1. 2014年 하반기 國政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2. 주요 國政 이슈별 추진환경 진단 및 건의사항

상반기 國政운영 평가 및 하반기 의미

집권 1년차 다져놓은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경제 · 안보분야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으나 뜻하지 않은 **여객선 사고**가 國政 **시험대**로 대두

- o 연초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계획'** · **'드레스덴 구상'** 등 역동적 **미래 비전**을 제시하시고 **후속절차**가 진행되면서 임기 **2년차**에 대한 **기대감** 고조

- o **지지도 상승국면**에서 맞닥뜨린 **'여객선 사고' 악재**가 정국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國政 추진력** 약화 · **사회 분위기** 저하 등 **위기**에 봉착

  * 대통령님 지지도가 64.3%(4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 여객선 사고 여파로 40% 후반대로 하락

- o 어려운 여건 속에 치른 **6.4 地選**에서 **'심판론'** 공세를 극복하며 선전, **再도약** 발판을 마련했으나 **정치권 非협조 · 개각 논란** 등 **정상화**에 험로

올해 하반기는 **집권 중반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으로 그간의 **國政** 난관 ·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정부 **핵심치적**으로 각인될 **성과**를 내는데 진력해야 할 시기

- o 대통령께서 **對국민담화**시 약속하신 **국가개조** 이행 및 **內需 진작 ·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한데다

- o 與黨 **지도부 교체**(7.14) · **재보선**(7 · 10월) 등으로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與野를 설득, **핵심법안 처리**를 이끌어내는 **정치력** 발휘가 요구되며

- o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는 그간 지지도 상승을 견인했던 **외교 · 안보 정책**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략적 상황관리**도 긴요

- o 더불어, 국민들은 여객선 사고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과 **의지**를 다지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기대

  * 전문가 패널 조사에서 대통령님의 '소통 · 공감 리더십 요망' 의견이 상당(150명중 38명)

對北정책 환경

o **北**은 김정은 **권력 공고화** 노력에도 불구 간부층內 **공동체의식** 약화·**통치자금** 고갈 및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고립 심화 등 대내외적 **난관** 직면

o 당분간 **대외 정세** 변화에 따라 **和·戰 양면전술**로 긴장수위를 조절하면서 **체제 공고화**에 집주, 南北관계의 **획기적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

- **日·러**와 밀착 및 **對中관계 복원**을 통한 **고립 타개**를 모색하면서

  * 日·北 합의는 北의 과거 납치문제 관련 약속파기 전례(08.8)·북핵문제와 연계 등 감안시 관계 급진전은 어려울 것이나, 쌍방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年內 정상회담 가능성 상존

- **'UFG 연습'**(8월) 빌미 **對南 위협수위**를 고조시키면서도 **아시안게임**(9월) 참가를 기점으로 **유화제스처**를 보내 **對北정책 전환** 압박 예상

- 그러나 상황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경우 **核실험·미사일 발사** 등 **벼랑끝 전술**로 판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

o 한편 **6者회담**은 **당사국간 非공식 회담** 개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회담 재개조건** 관련 접점 마련 여부가 **대화국면 전환**의 관건

* 韓·美는 대화 재개 이전 北의 비핵화 진정성 공약 등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中·北은 각각 '상호 균형적 이행' 및 '대화 전제조건 철폐' 주장 지속

o 그러나 국내외에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對北정책 지지 여론**이 공고히 형성되어 있어 **드레스덴 구상** 후속조치 과정에서 北 태도 변화에 따라 **주도권**을 강화해 나갈 여지는 충분

對外정책 환경

o **美**가 **중간선거**(11월)를 앞두고 **對外개입 자제·상황 관리**에 치중하면서 **亞太 중시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域內 **의구심**이 확산

- **日**의 **안보역할 확대**를 용인, **中 견제**에 활용하면서 **北核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 해결책** 제시보다 **상황악화 방지** 수준에서 대응 예상

- 이를 틈타 **日**이 **과거사·영토 도발** 등 **우경화 행보**를 강화하고 **中**도 東·南중국해 **制海力 확대**에 나섬으로써 **域內불안** 가중 우려

o **韓·美**간에는 **전작권 전환** 再연기(10월 결정) 및 **원자력 협정** 개정·FTA 등 **동맹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것이나 세부 협상과정에서 兩國간 **입장차**가 부각될 경우 여론을 **자극**할 소지

o **韓·日**간에는 「아베」 정권의 **위안부 문제** 회피 및 **평화헌법 해석** 변경·**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좀처럼 관계개선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전망

< 하반기 日 우경화 예상 행보 >

> ▸ 위안부 문제 : 月 1회 국장급협의 진행 ⇒ 법적책임·강제성 부인 지속
> ▸ 야스쿠니신사 참배 : 종전일(8.15)·추계例大祭(10.17~20) 계기 집단참배
> ▸ 집단적자위권 용인 : 6월말~7월초 헌법해석 변경 → 가을 임시국회시 관련 법제 정비 → 연말 美·日방위협력지침 개정시 반영

o **韓·中**간에는 「시진핑」 주석 訪韓(7.3)·대통령님 訪中(11월) 계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가 기대되며, **韓·러**관계는 서방권의 **對러 제재** 동참 요청 등이 부담으로 작용, **非정치 분야** 위주로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

o 이와 함께 하반기 **UN 총회**(9월) 및 **APEC·ASEAN+3·G20**(11월) 등 **多者 정상회의**들은 우리의 **중견국 외교·통일 리더십**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

정치 · 공직사회 분야 : **여객선 사고 후유증 · 재보선 등으로 國政 정상화 지연**

o **여객선 사고 · 地選**을 거치며 요동쳤던 **民心**이 **안정**을 찾아갈 것이나 여객선 사고 **진상규명**을 둘러싼 野黨의 **정부 책임론** 공세와 **후속조치 입법** 관련 與野간 政爭으로 國政 **정상화**에 상당기일 소요 우려

o 정치권은 **與黨 전당대회 · 재보선** 등으로 **정국 유동성** 증대 예상

- 규모가 커진 **7월 재보선**(15곳)에서 與黨이 예상밖으로 **패배**(現 147석) 할 경우 **입법환경** 악화 등 **國政 부담**이 가중되고

- **與黨**은 **7.14 전당대회 · 재보선**(7 · 10월)을 치르면서 黨內 갈등이 심화 되는 가운데 **黨權 향배 · 선거결과**에 따라 **黨 · 靑관계**에 변화 소지

o 國會는 후반기에도 **국회선진화법** 존속과 **법사위원장**의 관행적인 **野黨 수임**으로 **핵심 입법과제** 처리 여건이 크게 호전되기는 **난망**

o 한편 **공직사회**는 **조직개편 · 인사이동**에 따른 **혼란 · 위축상**과 함께 **연금개혁 · 관피아 척결** 등을 놓고 **'희생양'**으로 내몰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불만 · 저항**이 거세질 우려

경제 · 民生 분야 : **완만한 회복세 예상, 對內外 리스크 관리가 관건**

o 하반기 경제는 선진국 중심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증가** 및 **안정적 물가상승률** 등에 힘입어 **3%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o 그러나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상승세 및 해운 · 건설 등 일부 산업군의 **기업 실적** 악화 · **勞使 갈등** 등이 경제회복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 **內需**의 경우 여객선 사고 충격을 벗어나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증가율**은 여전히 성장률을 밑돌아 **경제회복 견인차** 역할에 역부족 전망

o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환율경쟁**속 **원화강세** 장기화 우려에다 **中 성장세 둔화**에 따른 **對中 무역환경** 변화 · **美 양적완화 축소** 등 **리스크** 散在

* 美 양적완화 축소와 연계된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을 상회할 경우 유로존 재정 위기국 ·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불안 재연 소지

o 특히 **소비 · 투자**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부양 요구**가 계속되는 반면 **稅收부족 · 경제 활성화法** 입법 지연 등이 **한계**로 작용

사회 · 언론 분야 : **비판세력 · 언론의 國政 발목잡기가 부담**

o **地選**을 통해 제도권에 대거 진입한 **전교조 · 민교협** 출신 **교육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 이념편향 **의식화 수업** · '정권퇴진 선언 교사' 징계 거부 등 **현안투쟁**을 통해 교육현장 혼란 유발 가능성

* 전교조는 법외노조訴 패소(6.19) 이후 野圈 · 전교조 출신 교육감 등과 연계, 교원 노조법 개정안 처리 등 합법化 투쟁 전개

o **諸 비판세력**들도 각종 이슈 연계 對정부 **투쟁 불씨 이어가기**에 안간힘

- **세월호 대책회의**가 여객선 사고 **특별법** 제정 · **진상조사위** 구성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민노총 · 全農** 등 직능단체들도 이른바 **'勞 · 農 · 貧 연대'**下 각종 **현안투쟁**에 나서는 한편

* 8 · 15 및 10 · 4 등 계기시마다 대규모 反정부 집회로 勢 과시 시도

- **보건 · 복지 분야** 최대 현안인 **기초연금법 시행**(7.25 첫 지급)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착수에 맞춰 각종 **폄훼 · 왜곡** 공세에 나설 우려

o **언론계**는 **2기 내각 출범 · 국가개조 추진**에 따른 각종 **논란 · 이슈** 분출 및 **경제 활성화** 정책 **중간 평가**가 맞물려 매체별 **논조차** 심화 예상

- 일부 **보수지**가 현안별로 **정부 비판**에 나서는 등 **논조 경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방송사** 勞使갈등과 **종편**의 **독자행보** 강화도 부담요인

- **비판매체**는 **인사청문회** 및 **여객선 사고 國調·재보선** 등 **정치일정**을 겨냥, 정부책임론·핵심정책 흠집내기 등 **악의적 보도행태** 지속

o 한편 **교황 訪韓**(8월)·**인천 아시안게임**(9월) 등 각종 문화·스포츠 행사는 **사회활력 제고·국민통합**에 호재로 작용 기대

< 하반기 정부 기회·위기요인 평가(SWOT) >

강점
- ▸ 대통령님의 견고한 지지기반
- ▸ 국민들의 國政운영 기대감 여전
- ▸ 수출·고용 증가 등 긍정적 경제지표
- ▸ 국내외 對北정책 지지여론 공고

약점
- ▸ 여객선 사고 여진 지속
- ▸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님 리더십 타격
- ▸ 여당內 계파갈등 및 독자노선 조짐
- ▸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력 저하
- ▸ 반대세력 對정부 투쟁 지속

기회
- ▸ 내각 개편으로 분위기 쇄신
- ▸ 선진국 중심 세계경제 회복세
- ▸ 北 체제 불안정성 가중
- ▸ 하반기 多者 정상회의 집중
- ▸ 교황 訪韓·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위기
- ▸ 與黨 전당대회·재보선 등 정치일정
- ▸ 원화 강세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
- ▸ 역내 주도권 다툼으로 韓美日 공조 이완
- ▸ 南北관계 경색·北 對南도발 가능성

※ 전문가 조사(5.13~6.9, R&R, 150명) 결과

- 現 정부 강점으로 ❶ 여객선 사고 계기 국정쇄신 환경 조성 ❷ 경상수지 흑자·물가안정 등 경제 활성화에 우호적 여건 등을 꼽는 반면

- ❶ 여객선 사고 대처 미흡 ❷ 폐쇄적 관료사회·공직자 무사안일 등을 약점으로 지적

< 기본 방향 >

- **경제 · 民生 살리기**에 총력 → **國政 드라이브** 동력 확보
- **핵심 국가개조 과제** 성과 도출 → 국민 **지지기반** 공고화
- **東北亞 정세대응 · 드레스덴 구상 진전** → **對北 이니셔티브** 유지

1 경제 · 民生 살리기에 총력

❶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드라이브 본격 가동

o **새 경제팀** 출범에 맞춰 **경제 · 民生정책** 총력 추진을 천명하시며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기업인들과 회동** 등으로 **경제 살리기** 의지 각인

o 핵심과제인 **규제개혁** 속도를 올리고 **추진체계** 보완으로 **실효성**도 배가

- 손대기 어려운 **덩어리 · 민감 규제**는 **부처 · 국회 · 지자체 · 업계** 공동 작업을 통해 **法 체계** 전반을 손질, **사각지대 · 부작용**을 방지하고

- **안전 강화 · 규제완화** 기조간 **충돌**이 예상되는 사안은 명확한 **기준 설정** 및 **民 · 官 심사**를 통한 **옥석 가리기**로 혼선 · 동력 이완 차단

  * 부처별 감축목표도 현실에 맞게 조정, 건수 늘리기式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

o 여타 과제들도 그간의 **성과 · 미진사항** 점검을 토대로 **성과 도출**에 매진

- **'고용률 70%'**의 경우 단계별 일자리 **목표치 · 산정근거** 마련 및 **시간 선택제**에 대한 경제계 오해 해소를 통해 **추진력**을 **회복**하고

- 공공기관 정상화는 9월 중간평가 계기 **중점관리기관**(39개)들의 성과를 토대로 **성공모델**을 도출, 全기관으로 **확대**하여 핵심 치적으로 견인하며

- **黨·政 공조**는 물론 **재계·언론** 등의 **입법지원 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핵심 **民生·경제 활성화 법안** 조기 통과에도 만전

o 특히 年末경에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국민 보고회** 등으로 **지지여론**을 다시한번 **결집**시키는 계기 마련

❷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 안정적 관리 병행

o **경제부총리** 중심 **예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일사불란한 **대응태세** 확립

- **환율 변동** 등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 등 대상 **맞춤형 지원책**으로 경제회복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 **TPP·韓中 FTA** 등 주요 **통상협상** 추진 관련 **산업·분야별 영향** 심층 분석 및 **타격업종 육성방안** 선제 제시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고

- **勞使갈등**은 **不法파업·집회 嚴斷**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되, 한계에 봉착한 **노사정委 업그레이드**를 위해 **원로·전문가** 등 제3자를 포함, 중재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o 한편 그간 **경기진단·처방**에 있어 **엇박자**를 내 온 **기재부·韓銀**간 **협의채널** 강화 등 **일체감**을 높여 금융정책 **일관성·실효성** 담보

2 핵심 국가개조 과제 성과 도출에 주력

❶ 2期 내각의 안정적 출범·國政 정상화에 역량 집주

o 당면 **인사청문회** 관련 **黨·政**이 전열을 가다듬어 **쟁점사안 대응전략** 수립 및 **능력·정책 검증** 분위기 조성 등으로 원만한 통과를 이끌어내고

o 국민 관심이 쏠려있는 **국가안전처장** 등 상징적 지위에 **현장 전문가·新進인사** 등 참신한 인물을 발탁, **쇄신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o 내각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장·차관 국정토론회**'를 개최, **국정철학·당면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새 출발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활용

- **부처·기관**별로도 국가개조 방향 및 **공직사회 역할**에 대한 자체 **교육·실천과제 발굴** 등으로 **능동적·자발적** 개혁분위기를 조성하고

- 신설·통폐합 **부처·기관**의 경우 **업무분장·권한** 정비 및 산하 기관간 **지휘·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조속한 **안착** 견인

* 여객선 사고로 연기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신생 국가안전처 주도로 실시, 새 재난안전 대응체계 점검 기회로 활용

o 아울러 大統領께서 **총리·부처 장관**들에게 임무와 역할을 주문하며 **힘**을 실어주심으로써 국정운영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시는 동시에

* 전문가 패널조사(150명) 결과, 대통령님 국정운영 방식 관련 ▲ 내각에 참신·전문성있는 인물 기용(23명) ▲ 내각에 권한 위임(16명) 건의가 1·2위를 차지

o 民生현장·대학가 방문 등 **對국민 접촉면** 확대를 통해 국민과 **소통 노력**·국가개조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하심으로써 **지지여론** 확보

❷ 국가개조 법안 처리·非정상의 정상화를 양축으로 성과 견인

o **정부조직 개편안·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등의 **조기 통과**를 위해

- 黨·政간 **입법공조**는 물론 필요시 **대통령**께서 **野黨 지도부 초치·'국가지도자연석회의'** 개최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 **건전언론·단체**들도 **政爭 중단·개혁입법 처리 촉구** 및 **'국회 선진화법' 폐지 여론전** 등 對野 **압박** 강화로 입법활동 지원

o **非정상의 정상화**는 2차 과제 선정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안전·民生** 분야를 우선 **선별**,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개조 **추진동력**으로 삼고

o **국가안전처** 출범 지연 등으로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도 추진여건을 종합 점검, **진척도**를 높이는데 역점

❸ 정부개혁(1단계) 본궤도 이후 民間 주도 국가선진화(2단계) 진행

o **건전언론·단체**들이 나서 各 분야 **선진화 과제** 발굴 및 **'장인정신 찾기'**·**'내 탓이오'** 등 **의식개혁 캠페인·공익사업** 전개로 **분위기**를 리드하고

o **與黨**도 **'정치 선진화'**를 화두로 **國會선진화법** 개정 및 **지역주의 극복** 등 **정치개혁** 논의를 촉발함으로써 동참

o 정부도 **국민안전·관피아 척결** 등 **핵심 어젠다**의 **이행상황**과 **국민여론** 흐름을 면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추진력** 유지

3 域內 주도력 강화 및 드레스덴 구상 진전

❶ 韓·美 동맹을 근간으로 안보상황 관리에 주력

o 北의 **기만술책·위협 공세**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신임 **국가안보실장** 중심 **위기대응 체제** 정비·**국방력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o 하반기內 **韓·美 전작권 전환** 협상 마무리 및 **韓·美·日 정보보호 MOU** 추진 등을 통해 공고한 **對北 공조 전열**을 과시하는 한편

o 北 **核실험 징후**시 **韓美간** 긴밀한 **협의·對北감시**를 통해 **'추가 도발시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하는 등 **단호한 대응의지** 천명

❷ 임기內 '드레스덴 구상'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닦기 착수

o **통일준비委** 출범을 계기로 드레스덴 구상 **후속 조치·청사진** 마련의 속도를 높여 **통일 담론**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는 한편

o **6者회담** 및 **5.24 조치 해제 ·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쟁점현안의 경우 **필수 전제조건**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에 주력

- **中 · 北**의 **6者회담** 문턱낮추기 기도에 대해서는 **韓 · 美 협의**아래 일부 **유연성**을 발휘해 나가되, 회담 재개시 北核 **고도화 차단** 및 **실질적 非핵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 국내 일각의 **5.24 조치 해제** 요구는 정부의 변함없는 **南北관계 개선 의지** 부각과 함께 北의 **성의있는 조치** 촉구 등으로 **부담**을 덜어내면서

- **금강산 관광**은 핵심조건(사과 · 재발방지 · 신변안전 보장 등) 충족시 **이산 상봉** 정례화를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 **재개** 검토

o 北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협의 및 **교황** 방한시 北 신자 미사 참여 제의 **수용**을 이끌어내는데 주력, **대화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o 또한 APEC · ASEAN+3 등 多者회의시 **정상외교 일정**을 정교히 조율해 **국제사회**에 우리 **통일비전**을 설파, 통일 **후원세력** 확대

❸ 주변 4강과 전략적 협력기반 강화 지속

o **韓 · 美 전작권 전환** 再연기 등 당면 협상을 **미래 전략동맹 격상** 전기로 활용하면서 **北 인권문제** 관련 **글로벌 압박연대** 구축에도 협력하고

o **日**에 대해서는 **'역사직시'** 기조를 견지하되, **민간 · 경제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관계개선 기반**을 다져 나가면서

- 적절한 시점에 **장관급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兩國관계 **주도권**을 선점하는 방안도 신중 고려

o **中**과는 「시」 주석 訪韓 등 계기 정상간 **협력 파트너십**을 공고화, **드레스덴 구상** 등에 대한 지지 확보를 통해 **北 변화** 및 **비핵화 진전**을 유도하고

o 러와는 **美·러 관계** 주시下 非정치 분야에서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亞太진출 강화**에 대비, 경협·인적교류 등 전략적 **협력공간** 확대

대내외 정세불안 등 어려움 속에서도 大統領님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여러 기회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경우, 하반기 國政운영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

※ 붙 임 : 1. 2014年 하반기 국정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2. 주요 國政 이슈별 추진환경 진단 및 건의사항

1. 2014年 하반기 국정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

여론조사 기관인 R&R(대표 : 노규형)을 통해 전문가 패널(150명)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國政운영**과 관련 2회에 걸쳐 서술式 **심층 여론조사** (Web Survey 방법, 1차 5.13-27 · 2차 6.9)를 실시

대통령님 연초 국정운영 구상 평가

o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부정 평가**(58.0%)가 긍정(34.7%)보다 **우세**

- **'한국경제 再도약**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체적 목표설정'**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 천명'** 등은 **성과**로 볼 수 있다며 긍정 평가한 반면

- 그간 여객선 사고와 지방선거 등으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답변이 큰 비중 차지

-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① **세부계획 조속 마련** ② 규제개혁 · 경제혁신 치중 ③ **서민경제**와 **직결**된 사안 등을 **역점 추진**할 것을 주문

구 분	주요 응답 요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평가	▪ 구체적인 성과 없음 62명 ▪ 경제 再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12명 ▪ 규제 개혁 · 철폐 천명 8명 ▪ 경제혁신 기반 마련 7명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향후 추진방향	▪ 세부계획 조속 마련 14명 ▪ 규제개혁 · 경제혁신 강화 14명 ▪ 서민경제와 직결된 사안에 초점 9명 등

o '**非정상의 정상화**'도 전반적으로 **부정적 답변**(53.3%)이 **우세**

-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 · 부조리**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이슈화**했다는 점과 **공공부문 개혁**에 **초점**을 맞춘 점 등은 긍정 평가하였으나

- '非정상이 무엇인지 **개념없이** 우후죽순 **추진**' 및 '**여객선 사고 여파로** 오히려 **악화 · 후속 처리결과**를 보아야 알겠음' 등 부정적 답변도 상당

-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① **국민 공감 개혁과제 선정** ② **정부**의 **솔선수범** ③ 구체적인 정책 제시 ④ **지속적인 정책추진** 등 順으로 제언

구 분	주요 응답 요지
非정상의 정상화 평가	■ 非정상이 무엇인지 개념정립 없이 우후죽순 추진 54명 ■ 잘못된 관행 · 부조리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이슈화 28명 ■ 여객선 사고 여파로 오히려 악화 17명 ■ 공공부문 개혁 6명 등
非정상의 정상화 향후 추진방향	■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과제 선정 14명 ■ 정부의 솔선수범, 가시적 성과 도출 13명 ■ 구체적인 세부정책 제시 12명 등

o 반면 **통일대박론**은 **긍정 시각**(50.0%)이 부정 시각(44.7%)보다 **우세**

- '국내외적인 **통일 이슈화**'와 '**통일의지 천명**' 등은 **높게 평가**한 반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고 **南北관계 개선**이 미흡하다고 답변

-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① 실질적인 **南北관계 개선** ② 정책 구체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③ 실효성 있는 대책기구 설립 등 順으로 응답

o 기타 **국정 성과**로는 '적극적인 외교활동 및 **해외 순방 · 對日외교**' 등 **외교분야**에서 **높은 점수**(16명)를 받았고, **규제혁신**(7명) 및 **4대악 척결**(6명)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도 **긍정 평가** 획득

구 분	주요 응답 요지
통일대박론 평가	■ 국내외적인 통일문제 이슈화 49명 ■ 南北관계 개선 미흡 10명 ■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음 8명 ■ 통일의지 천명, 국제적 지지획득 6명 등
통일대박론 향후 추진방향	■ 실질적인 南北관계 개선 31명 ■ 정책 구체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19명 ■ 실효성 있는 대책기구 설립 12명 등

하반기 국정운영 환경 진단

o 하반기 국정운영의 가장 큰 기회이자 위기요인으로 **'여객선 사고'**를 지적하며 **사태 수습**과 **정부쇄신 성공여부**가 향후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o **現 정부**의 **강점**으로 ① 여객선 사고 계기 **국정쇄신** ②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여건 개선 등을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① **여객선 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 불신 가중 ② **관료주의 폐해 · 공직자 무사안일** 등을 제시

강 점		약 점	
여객선 사고	■ 여객선 사고 계기 국정쇄신 64명 ■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 13명 ■ 사회개혁 · 변화에 대한 국민기대 8명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공감대 1명 등	여객선 사고	■ 대정부 실망 · 민심이반 69명 ■ 사회 ·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안감 6명 ■ 안전시스템 부재 · 안전 불감증 4명 등
경제	■ 경상수지 흑자 등 우호적 경제여건 21명 ■ 경제 선진화 요구 1명 ■ 창조경제 · 규제개혁 · 비정상의 정상화 1명 등	정부 · 정치권	■ 관료주의 폐해 · 무능 · 안일함 11명 ■ 구세대 정치인 · 인사난맥 6명 ■ 관료조직 반발 · 공무원 개혁저항 5명 ■ 정치인 비협조 2명 등
대통령	■ 대통령 개인 신뢰 이미지 7명 ■ 높은 대통령 지지도 5명 ■ 바닥친 지지율 1명	대통령	■ 소통부재 · 불통 13명 ■ 독단적 리더십 12명 ■ 정책추진 부진 1명 등
南北 · 외교	■ 南北관계 · 통일정책 4명 ■ 국제관계 3명 ■ 韓中관계 3명 등	南北 · 외교	■ 南北관계 · 북한도발 · 核 위협 13명 ■ 韓日관계 악화 8명 ■ 동북아 정세 5명 등

하반기 대통령님 국정운영 관련 제언

o **대통령님 리더십**과 관련하여

- **소통 · 공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은 가운데 **국정운영**의 **유연성**과 **국민 전체**를 **포용**하는 **통합의 리더십 발휘** 기대

- 기존의 **정적 · 소극적 이미지**에서 탈피, **능동적 · 적극적 국정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여객선 사고** 이후 **달라진**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

o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 **전면적 인사시스템 개혁**과 함께 새로 출범한 2기 내각에 발탁된 인사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 시스템** 조성 제언

- **인적 쇄신**을 **시작**으로 기존의 권위주의적 · 수동적 · 책임회피성 관료조직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직사회 개혁** 추진 촉구

구 분	주요 응답 요지
대통령님 리더십	■ 소통 · 국민 공감 리더십 38명 ■ 열린 국정운영 · 유연성 14명 ■ 능동적 · 적극적 국정운영 12명 ■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정치적 행보 9명 등
대통령님 국정운영 방식	■ 인사시스템 개혁 · 주변 참모진 개편 23명 ■ 국정운영 전문성 확보 및 내각에 권한 위임 16명 ■ 공직사회 개혁 및 정부시스템 전면 개편 10명 등

o **정치·행정분야**는 하반기 **가장 신경**써야 할 과제로 '**소통**'을 지적

- **최우선 과제**로 국민·정치권(야당)과의 **소통·대화**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 건의

- 이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 '**국가안전시스템 구축**'·'**인사개혁**' 등 여객선 사고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

o **경제·民生분야**는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을 가장 먼저 거론

- **최우선 과제**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먼저 꼽은 가운데 공공요금·전세값 관리 등 '**서민생활 안정**' 및 '**내수 활성화**' 정책추진 요망

- 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종된 이슈인 '**경제민주화**' 추진 의견도 제시하며 양극화된 **경제구조 개선** 및 경제적 약자 배려도 요구

o **사회·복지분야**는 **국가안전시스템 再정비** 우선 추진을 촉구

- **핵심 추진과제**로 '재난대책 수립'·'안전관련 법령 재정비' 등 '**국가안전시스템 개혁**'을 요구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등 **사회통합**을 위한 **대통령님 리더십** 발휘 제언

- 여객선 사고로 분열되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과 철저한 반성·명확한 사태수습을 통한 **국민 치유**를 희구

o **외교·안보분야**는 **南北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관계개선**을 최우선 지목

- **최우선 과제**로 **南北관계 개선** 및 **상호 신뢰회복**을 거론하면서 통일 대박론 이행을 위한 필수 선결과제라고 답변

- 장기화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개선**해 나가는 등 동북아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실리 외교**가 **필요**함을 강조

구 분	주요 응답 요지
정치・행정	■ 국민・야당과의 소통 노력 27명 ■ 공기업・공직사회 등 공공부문 개혁 추진 19명 ■ 국가안전대책 마련 17명 ■ 인사정책・인사시스템 개혁 17명 등
경제・民生	■ 일자리 창출・실업문제 해결 20명 ■ 民生경제 안정 및 회복 16명 ■ 경제 민주화 추진 및 실현 13명 ■ 내수 활성화 8명 ■ 경제혁신・규제개혁 8명 등
사회・복지	■ 국가안전망 재정비・확충 19명 ■ 사회통합 노력 및 사회통합 정책 수립・시행 19명 ■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스킨십 강화 17명 ■ 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11명 ■ 국민치유 활동 및 정책 추진 9명 등
외교・안보	■ 南北관계 개선 및 대화 확대 43명 ■ 통일대박론 구체화 및 통일 노력 강화 18명 ■ 對日관계 개선 및 대화 확대 17명 ■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핵 저지 10명 ■ 실리 외교 및 국익 우선 활동 전개 6명 등

2. 주요 國政 이슈별 추진환경 진단 및 건의사항

國政 전반

1. 정부 2期 내각 출범 계기 '國政 새출발' 의지 결집
2. '국가개조' 民·官·政 추진체계 정비로 실행력 제고

경제·민생

3. 하반기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 철저 관리
4.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제고로 경제 회복세 가속화
5. 쌀 관세화·TPP·韓中 FTA 관련 國益 극대화 전략 강구
6. 노동현안 관련 勞使政 대화 활성화로 相生문화 정착

외교·안보

7. 北 안보위협 고조 대비 강력한 국방태세 확립
8. '드레스덴 구상' 추진력 확보를 위한 대내외 여건조성 주력
9. 日 우경화 행보 관련 정교한 외교·여론관리 전략 강구
10. 원자력 협정·전작권 전환 등 韓美 동맹현안 면밀 관리

교육·사회·문화

11. 비판세력의 '여객선 사고' 빌미 투쟁 再점화 기도 제어
12. 교육현장의 이념·정치편향 행태 시정·제어에 만전
13. 국책사업 추진 관련 지역民心 악화요인 면밀 관리
14. 교황 訪韓을 國民화합·국가위상 제고 계기로 활용

정부 2期 내각 출범 계기 '國政 새출발' 의지 결집

환경 진단 ⇨ **大統領님 흠집내기 · 國政난맥 시비 등 악재 산재**

o **정부조직 개편안**의 國會 처리가 늦어지는데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 실패'** 논란 재연으로 大統領님 **리더십** 훼손이 우려되고

o 국가개조 본격 추진에 따른 **공직사회** 혼란 · 개혁저항 및 전환기 업무 **공백 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감자료 유출 등 **돌발악재** 소지도 상존

건의 사항 ⇨ **핵심과제 이행 · 쇄신면모 부각으로 국민신뢰 회복**

o **인사청문회**를 앞둔 공직 후보자들에게 해당부처 **조직 · 업무 개혁 방향**에 대한 확고한 **비전 · 소신**을 피력토록 주문하시고

- **정부조직 개편** 입법 처리가 완료되는대로 공직사회 **적폐** 청산 및 **신생 · 통합부처** 업무 **정비**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도록 하고

- 빠른 시일내 **'장 · 차관 국정토론회'** 등을 개최, 정부 **국정철학**과 **쟁점 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로 삼으며

- 各 부처 · 기관별로도 후속인사 마무리 후 **'자체 결의대회'** 등을 통해 **기강 확립 · 개혁과제 발굴** 등 자발적 **쇄신**에 나서도록 독려

o 핵심 **국정과제 · 추진체계** 再정비 및 **정치 쟁점화** 소재 관리도 병행

- ▲ **국가개조** ▲ **규제개혁** ▲ **非정상의 정상화** ▲ **안전강화** 등 어젠다별 세부과제 및 소관기관 · 역할분담을 再정리, **혼선 · 공백**을 최소화하고

- **여객선 사고 수습 · 안전시스템 보강**에 국민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추진상 **장애요인**과 각계 요구를 심층 진단, **종합대책** 보완

‘국가개조’ 民・官・政 추진체계 정비로 실행력 제고

환경 진단 ⇨ 국민 공감 불구 개혁 저항・정치권 非협조 등 난제 상당

- **大統領**께서 **국가개조**를 화두로 제시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천명하시고 공직사회 개혁・정부조직 개편 등 **후속과제**가 도출되면서 추진 **본격화**

- 그러나 **국가개조**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개념・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인식 속에 **정부혁신**만 **부각**되고

- 소위 정부의 **‘셀프개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다 국민들의 성급하고 높은 **기대감** 및 기득권층 **저항**・정치권 **非협조** 등 **걸림돌** 산재

- 다만 정부조직 개편 논란 등 **첫 걸음**부터 **어려움**을 겪었으나, **地選**을 통해 국민적 **기대감**을 **再확인**, **추진동력**을 **정비**할 수 있는 여유 확보

건의 사항 ⇨ 청사진 조기 구체화를 통한 국민 동참 견인에 초점

- **내각 개편**이 완료되는대로 **국가개조**의 개념・방향성 및 분야별 **핵심 과제**를 정리해 ‘마스터플랜’ 형태로 발표, **목표의식**을 결집한 후

  - 全부처 순회 **국정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정부內** 인식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의 **선도 역할**을 각인시키는 한편

  - ‘국가지도자연석회의’ 등 **與・野・政 협의체** 가동 및 **民官** ‘**국가개조 (혁신)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함께하는 국가개조**’ 분위를 조성하며

- **정부혁신**을 **출발점**으로 국민의식 개혁・국민통합 등 **사회혁신** 과제도 **단계적**으로 병행 **추진**,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책임감 공유** 유도

  * 건전진영에서 촉발된 국민의식개혁 운동을 유기적 네트워크로 결합하고 對국민 홍보를 강화, 汎사회적 캠페인으로 확대

하반기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 철저 관리

환경 진단 ⇨ 내수둔화 흐름에다 경제회복 위협 대외변수 散在

o **여객선 사고**로 촉발된 **민간소비 위축**으로 요식업·관광 등 내수분야 충격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투자**로 확산시 **성장률 저하** 불가피 전망

- 5월 **백화점·대형마트** 매출이 **할인행사**에도 불구 전년대비 **1~2%대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주체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있으며

-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들도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사업계획을 再검토하는 등 **투자·고용 확대**에 주저

o 한편, **美** 금리인상시 **가계부채·한계기업** 부실 증가 등으로 **금융불안**이 심화될 소지가 있고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올해 222億弗)에 따른 **원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 약화**도 부담 요인

건의 사항 ⇨ 내수진작 노력 배가와 함께 對外 취약점 보완에 주력

o 정부가 **지자체·대기업** 등에 축제·상품 마케팅 **재개**를 요청하는 등 국민 **경제심리** 개선 및 경제 정상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를 실시하고

o **안전분야 투자**에 대해 **제조업** 수준 **세액공제** 제공 등으로 **투자유인·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內需 회복**을 견인하면서

o 美 금리인상에 대비, **다중채무자·非은행권 여신**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부문**도 **부실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o **환율 하락 압력**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 강구와 함께 환율변동에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책** 강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제고로 경제회복세 가속화

환경 진단 ⇨ 여객선 사고 여파로 핵심 경제정책 동력 저하

o 여객선 사고에 따른 **내수 둔화·내각 개편** 등이 경제분야에 **여파**를 미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동력 회복에 어려움 지속

기초가 튼튼한 경제	o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개혁은 중점관리기관(39개) 중심으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全공공기관으로 확산이 관건
역동적 혁신경제	o 혁신과제 59건 중 원격진료 등 11개가 지연되는 가운데 부처들은 ‘안전’을 핑계로 소극적 추진 및 건수 늘리기 치중 양상
내수·수출 균형	o 여객선 사고 이후 당분간 내수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환율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에도 타격 우려

건의 사항 ⇨ 신임 경제팀 중심 汎정부 협업 강화로 추진력 보강

o **여객선 사고** 수습 마무리 단계에서 **경제혁신 드라이브** 본격 再가동

- **신임 경제부총리 취임**을 계기로 경제정책 관련 **점검회의**를 연이어 개최, **유관부처·기관장** 대상 **긴장감**을 부여하시면서

- 그간 후순위로 밀렸던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추진체계 再정비 및 **黨·政·靑**간 긴밀한 **입법전략** 강구로 하반기內 성과를 도출하고

- 주요 **경제단체·大기업** 대상으로도 고용·투자 확대 등 **동참** 당부

o **‘덩어리 규제’** 혁파 및 **공공기관 개혁** 전방위 확대로 **성과** 극대화

- 국조실·기재부는 **‘규제개혁 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아래 파급력 높은 **덩어리규제** 선별·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 **공공기관 개혁**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각 부처들이 책임지고 산하 공공기관 **이행실태** 점검·**성과 부진** 기관 **독려** 등 적극 챙길 필요

쌀 관세화 · TPP · 韓中 FTA 관련 國益 극대화 전략 강구

환경 진단 ⇨ 年內 성과 가시화에 진력중이나 대내외 난관 산적

o 금년 말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로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 관세화 발표(6월 말) 이후 **농민단체 · 비판세력 반발**이 불가피하며

* 全農 주도 '식량주권汎국민연대'는 6.28 장외집회를 시작으로 쌀 관세화 반대운동 본격화

o TPP는 **'年內 참여 선언'**이 목표이나 **美**의 **미온적 입장**으로 진척이 더디고

* 7월중 TPP 12개 회원국간 '원칙적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美는 한국의 신규 참여보다 기존 회원국간 협상 타결이 우선이라는 입장

o **韓 · 中 FTA**는 年內타결을 목표로 **2단계 협상**을 진행할 것이나 **中 공산품 관세** 조기철폐 · **韓 농수산 시장** 개방 수준 관련 입장차가 여전

건의 사항 ⇨ **國益 극대화 협상전략 강구 및 國內 여론관리 병행**

o **쌀 관세화**는 再次 유예 시도시 **의무수입물량** 증가 · 여타 상품 **관세 인하** 불가피 등 **國益 부담**이 크다는 점으로 여론을 **설득**하는 동시에

- 관세화 발표 후 이어질 **WTO 회원국**들과의 **관세율 협상**시 **高率관세** 관철을 위한 **근거자료 · 논리 확보**에 만전

o TPP는 9월 **韓美 兩者협의**시 美측 협조 유도를 위한 **협상카드 정교화** 및 旣 파악된 회원국 **관심사항**들의 **수용가능** 여부 · **파장** 검토에 주력하면서

- 美측이 협조 조건으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 **산업부 · 농식품부** 등 유관부처간 분야별 **허용수위** 사전 **협의**

o **韓中 FTA**는 농산물 등 **초민감 품목**(500여개)을 저지선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農家 경쟁력 제고방안** 선제 제시 등으로 **반발 최소화**

* 농산물 R&D 지원 확대와 함께 KOTRA 등과 공조아래 농산물 對中수출 진작책 제시

노동현안 관련 勞使政 대화 활성화로 相生문화 정착

환경 진단 ⇨ **핵심정책 관련 勞使간 대립 지속**

o 정부는 **통상임금 · 근로시간 단축 · 공공기관 정상화** 등 핵심현안 관련 **勞 · 使 · 政 대표자회의** 추진 등 당사자간 **대화노력**을 지속할 것이나

통상임금	o 노동계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주장하며 현대 · 기아車 등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임단투 본격화 추진
근로시간 단축	o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재계 동참을 독려중이나 노동계가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 갈등 지속
공공부문 정상화	o 9월 정부의 중점관리기관 중간평가를 앞두고 兩 노총 공대위가 '勞 · 政교섭'을 요구하며 8월말 총파업 추진

o **민노총**은 **勞 · 農 · 貧 연대투쟁** 등을 명분삼아 비판세력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7.22 **동맹파업** 조직화 등을 통해 **존재감** 과시 예상

건의 사항 ⇨ **노동계 끌어안기 · 불법행위 嚴斷 등 투트랙으로 대응**

o **한국노총**과 물밑접촉을 통한 **노사정委 복귀** 유도 및 **전문성**있는 노동계 **인사 영입** 등 적극적 **'노조 끌어안기'** 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 학계 · 원로 등 제3세력을 포함, 노사정委 중재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되 공공부문 정상화의 경우 공공기관 '勞使 자율교섭' 원칙을 확고히 견지

o **불법 시위 · 파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아래 건전단체들의 **사전 집회신고**를 통한 **장소선점 · 인근 맞불집회** 등으로 제어

o 핵심 **고용정책 이행상황 · 추진체계**를 再정비, 성과 도출에도 역점

- **재계**의 **근로시간 단축 ·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이해 · 동참**을 유도하면서 분야별 정확한 일자리 **통계치 산출** 등 정책근거 확보노력도 병행하고

-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 여타 사업장들이 **원용**토록 지원

北 안보위협 고조 대비 강력한 국방태세 확립

환경 진단 ⇨ 北, 기만적 유화공세·도발위협 등 이중전략 지속

o **北**은 간부층內 **공동체의식** 약화·**통치자금** 고갈 등 김정은 **통치기반** 불안정 및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고립 심화** 등 **난관**에 직면한 가운데

o 당분간 불리한 정세를 고려, **긴장수위**를 조절하다 상황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경우 '**추가 상황악화 조치**'로 선회할 가능성

- 대외적으로 **中**의 '**정세안정' 요구** 호응 및 '**日·北 합의**' 후속조치 추진 등 **유화 제스처**로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 日·北 합의는 北의 과거 납치문제 관련 약속파기 전례(08.8)·북핵문제와 연계 등 감안시 관계 급진전은 어려울 것이나, 쌍방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年內 정상회담 가능성 상존

- 우리에 대해서는 UFG(8월) 빌미 **對南 비방** 및 꽃게철(9~11월) **서해상 긴장 조성**과 함께 유사시 **核실험·미사일 도발**로 판 흔들기 시도 예상

건의 사항 ⇨ 안보대응태세 만전 및 對北 제재·압박수위 제고

o **안보라인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국가안보실장** 중심의 **위기대응 체제**를 再점검, 유사시 신속한 **정보공유·지휘체계** 가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o 對南 무력도발에 대비, **韓·美**간 「**공동 국지도발 대응계획**」 점검·보완으로 **상황관리** 및 **對北 억지력**을 다져나가면서

o **核실험·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염두, 美를 비롯한 유관국과 **안보리 추가 제재조치** 논의 등 대응방향을 사전 **조율**하고

  * 北 지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 인권문제 △ 자금줄 △ 심리전을 적극 활용

o 국내 **안보불안감** 불식·**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UFG 연습·국군의 날**(10.1) 등 계기시마다 대내외에 우리의 **對北 리스크** 관리능력을 부각

'드레스덴 구상' 추진력 확보를 위한 대내외 여건조성 주력

환경 진단 ⇨ **南北관계 불확실성 지속으로 추진력 약화 우려**

o 정부 구상에 대한 국내외 **긍정여론**에도 불구 **北**의 공식 **거부표명**(4.12) 이후 **후속조치**가 지연되면서 **對北정책 변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o **日·北 관계 밀착**으로 韓美日 **삼각 안보공조**에 균열이 우려되고 **中**의 **6者회담 문턱낮추기** 요구가 강화되면서 우리 **對北 이니셔티브** 약화 소지

건의 사항 ⇨ **北 태도변화 견인·국제사회 공조에 주력**

o **광복절 경축사**시 **'드레스덴 구상'**의 흔들림없는 추진의지 再확인 및 **'對北 인도적 지원'** 재개를 위한 **우선과제** 제시로 주도력을 강화하고

* 北의 만성적 경제난 해소를 위한 개발협력 지원을 유인카드로 활용하되, 지속가능·호혜성을 기준으로 선별 추진

o 조속한 **통일준비委 출범**으로 드레스덴 구상 **후속조치** 및 **통일 청사진 구체화** 작업을 진전, 국민 **이해도 제고·지지 여론**을 견인하면서

o **韓·美동맹**을 토대로 **日 견제** 및 **中·러·UN**의 조력자 역할 유도 병행

- 韓·美간 **對北원칙·6者회담 조건**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日**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사전 공조** 강조 등으로 **독자행동**을 차단하고

- 「**시진핑**」 訪韓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지지의사** 천명을 관철시키고, **러시아**는 **南·北·러 공동사업**을 지렛대로 지속적 동참을 유도하며

- **UN 사무총장실**·서울 상주 **南北겸임대사** 등을 통해 우선 추진과제의 실질적 사업주체인 **駐北 UN기구·국제 NGO**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 **ASEM**(10월)·**APEC**(11월)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보** 노력도 꾸준히 전개

日 우경화 행보 관련 정교한 외교·여론관리 전략 강구

환경 진단 ⇨ 「아베」 정권의 우익행보 가속화로 韓·日 갈등 심화

o 「아베」 정권은 **사회보수화** 사조에 편승, **위안부 문제** 회피·**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과거사 도발** 및 **안보역할 확대** 등 우경화 행보를 강화하고

< 하반기 日 우경화 예상 행보 >

- ▸ 위안부문제 : 月 1회 국장급협의 진행 ⇒ 법적책임·강제성 부인 지속
- ▸ 야스쿠니신사 참배 : 종전일(8.15)·추계例大祭(10.17~20) 계기 집단참배
- ▸ 집단적자위권 용인 : 6월말~7월초 헌법해석 변경 → 가을 임시국회시 관련법제 정비 → 연말 美·日방위협력지침 개정시 반영

o **'韓·日 정상회담'·'정보보호 협정 체결'** 제안 등 **유화제스처**를 보이면서도 **北韓**과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등 **이중전략** 구사 예상

건의 사항 ⇨ 국제사회를 통한 日 변화 유도·對韓 지지여론 확보 주력

o **'역사직시'** 원칙下 **非타협**(과거사)/**협력**(경제·안보) 분야 **분리 대응**

- 日의 **과거사 도발**시 즉각적이고 강력한 **유감표명**과 함께 美 등 국제사회에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 **규탄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 해외 **인권단체·교민사회** 등을 통해 **日帝만행 자료 폭로** 등 日의 **'퇴행적 역사인식'** 실태를 계속 **이슈화**, 여론 압박을 강화하되

- **韓·日 정보보호 협정** 문제는 對北억지력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있는 만큼 韓·美·日 **3각 틀** 내에서 **투명·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 **民間·경제교류** 및 실무 **대화채널**을 점진 확대, 관계개선 여건을 다질 필요

o 대내외에 우리의 **'역사직시' 기조**가 韓日관계의 **근본적 발전**을 위한 **기초**임을 각인, 對日정책에 대한 **지지여론** 결집

원자력 협정·전작권 전환 등 韓美 동맹현안 면밀 관리

환경 진단 ⇨ 민감현안 관련 異見이 외교갈등으로 오인 소지

o 韓·美간 **전작권 전환·원자력 협정·FTA** 등 현안 관련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으나 세부 협상과정에서 **입장차**가 과도하게 부각될 소지

전작권 전환 再연기	o 美측이 연합사 일부 용산잔류·화력여단 한강이북 잔류 등을 적극 제기하면서 國內 정치논란으로 비화 우려
원자력 협정	o 농축·재처리 권한 협의를 염두에 두고 △ 협정 유효기간 △ '한반도 비핵화 선언' 문구 포함 여부 등에 대한 힘겨루기 지속 예상
韓美 FTA	o 美國이 중간선거(11.4)를 앞두고 경제계 불만 무마를 위해 우리의 TPP 참여를 FTA 이행과 연계, 비관세 장벽 철폐 압박 강화 전망

건의 사항 ⇨ 동맹정신下 호혜적 타결 추진 및 대내외 여론관리 만전

o 창의적 **설득·협상 논리** 제시 및 **대화채널 격상**으로 합의 도출 견인

- 사안별 **협상전략 정교화**와 함께 美측 **요구사항**에 대한 **파급영향·부담요인** 등을 정밀 진단, **유연한 대응**으로 절충점을 모색하고
- 美 **행정부·의회·전문가 집단** 등을 전방위 접촉해 전작권·원자력 협정·FTA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상세히 전달,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 APEC·EAS·G20 등 다자회의 계기 **兩國 정상회담** 및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등 고위급 협의를 활용, **정치적 타결** 노력도 병행

o 국내 일각의 **사실 왜곡·反美감정** 조장 기도에 선제 대응

* 전작권 전환 再연기는 '北 위협 대응을 위한 동맹역량 강화'가 핵심이며 주권·軍 통수권과는 무관함을 적극 설명, 反美논란 차단

o 韓·美간 긴밀한 **메시지 조율**을 통해 **동맹**이 **공고**하다는 점을 부각, **북한** 및 **中·러** 등의 **韓美공조 이완** 기도에 선제적으로 대처

비판세력의 '여객선 사고' 빌미 투쟁 再점화 기도 제어

환경 진단 ⇨ 여객선 추모집회가 소규모·과격시위로 변질 양상

o 6월에 접어들면서 '일상복귀' 분위기 확산 및 **유가족**들의 **정치투쟁 거리두기**로 투쟁 **규모**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으나

o 용산범대委를 주도한 인권·PD계 단체들이 '**대책회의**' 집행부를 **주도**하며 민노총·전교조와 **연계**를 모색, 시위 **장기화** 가능성이 여전하고

* 6.28(민생대회)·8.15·10.4 등 행사에 맞춰 대규모 장외집회 개최 전망

o **여객선 사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또다른 **의혹·논란**이 불거지거나 **유사 안전사고** 되풀이시 **對정부 투쟁** 再점화 불씨로 작용할 소지

건의 사항 ⇨ 정부·보수권 협력下 투쟁 조기 종식 노력 배가

o 여객선 사고 **후속조치** 내실화·**유가족 배려**로 투쟁빌미 차단

- 黨·政이 공조, **감사·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및 **특별법 제정·진상조사위** 구성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 비판세력 **개입 여지**를 막고

- **國調** 과정에서 **가족대책委**와 지속적 **소통·배려**와 함께 **중도성향 가족대책委 대표**와 관계 강화로 우호적 여론 확산

o **보수언론·단체**들의 적극적인 **맞대응 집회·여론전** 전개 병행

- 언론은 비판세력의 국가재난 악용 **정치투쟁 행태 비판**과 함께 **국가개조 방안** 관련 **각계 논의**를 확산, 여론을 건설적 방향으로 이끌고

- **건전단체**들은 비판세력의 상습적 **투쟁 폐해** 등을 공론화, **지탄여론** 조성

o 비판단체들이 **의료·노동** 등 여타 이슈를 여객선 사고와 **결부**시키지 않도록 부처별 **현안관리·여론대응**에 주력, **연대투쟁** 차단

교육현장의 이념 · 정치편향 행태 시정 · 제어에 만전

환경 진단 ⇨ 비판성향 교육감 및 전교조의 정부 대립각 본격화

o **비판성향 교육감** 13명 취임(7.1) 이후 **한국사 국정화 반대** · 이념편향 **의식화 수업** · '정권퇴진 선언교사' **징계거부** 등 현안투쟁 강화
1 · 2 · 3차 161명

* 취임 전부터 2회 회동(6.7 · 6.12) ·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탄원(6.16) 등 교육정책 반대입장 노골화

o **전교조**도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6.19) 관련 정부 **후속조치**에 **반발**, **징계 불사 장외투쟁** 강행 등 대정부 **강경대응 움직임** 지속 전망

* 6.27 집단조퇴 장외투쟁 · 7.2 교사 1萬명 시국선언 · 7.12 전국교사대회 등을 추진

건의 사항 ⇨ 교육현장 좌클릭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 견인

o **교육부**에서 교육 건전화를 위해 **중심**을 잡고 **교육현장 리드**

- **강단**있고 정체성이 확고한 **부교육감 임명** 및 **보수성향 교육감**(4명)과의 소통 강화 · 인정감 부여로 교육현장의 **좌경화 방지**를 당부하고

* 건전 역사학자 중심의 공청회 · 세미나 등으로 한국사교과서 국정전환 당위성도 확보

- **市道교육청**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불법투쟁 엄단 및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를 독려, 불이행시 **직무이행명령 · 검찰 고발** 등 확행

o **교총**이 최대 교원단체(14萬명)로서 **비판성향 교육감**의 **전교조 비호** 행위에 대한 '**불복종 운동**' 등 비판 활동을 강력 추진해나가는 한편

o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도 '**연대체 구성**' 등 자체 역량 강화와 함께 '**전교조 폐해**' 집중 지적 등 여론관리 뒷받침

* 교총과 연대下 교육감 감시센터(시설 · 급식 등) 신설 및 편향교육 신고센터 활성화로 모니터링 강화

국책사업 추진 관련 지역民心 악화요인 면밀 관리

환경 진단 ⇨ **지역이기주의 · 외부세력 개입 등 갈등 확산요인 상존**

o **지방선거** 이후 그간 수면아래 가라앉았던 밀양 **송전탑 · 행복주택 ·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국책사업 갈등이 再점화 조짐

밀양 송전탑	o 한전은 움막 철거(6.11) 이후 공사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반대위는 民辯 등과 연대해 움막 再설치 · 소송 추진 등 방해 지속
행복주택	o 서울 · 경기지역 시범지구 7곳중 가좌지구를 제외한 6곳이 주민 반발 등에 가로막혀 未착공 상태
동남권 신공항	o 국토부가 8월 항공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산(가덕도) 對 대구 · 경북(밀양)간 유치경쟁 가열 움직임

o 반대세력은 **여객선 사고** 빌미 **安全문제** 등을 제기,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民辯** 등과 연대해 무차별 소송제기로 **國政 부담**을 야기할 전망

건의 사항 ⇨ **투명성 · 신뢰 기조아래 무분별 반대공세 단호 대처**

o 적절한 시기에 **'시 · 도지사 간담회'** 등을 개최하시어 신임 **지자체장** 대상 정부 **국책사업 · 지역공약** 추진 **협조**를 당부하시는 한편

o **부처 · 유관기관** 공조아래 집중적 **주민설득**으로 우호여론 확산

- 사안별 **民間 전문가 ·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및 주민 **요구사항** 수렴 · 신속한 **보상협상** 마무리로 **투쟁명분**을 약화시키고

- 지역 **언론 · 여론주도층**과 협조, **송전탑 안전성 ·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차이점** 등 쟁점별 홍보 및 동남권 신공항 **'공정 · 투명 추진'** 의지 부각으로 **對정부 불신요인**化 차단

o **警察**은 **폭력 · 시설파괴** 등 **돌출행동**에 대비한 엄정한 **현장관리**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 등 **不法행위 嚴斷**으로 여론오도 방지

교황 訪韓을 國民화합 · 국가위상 제고 계기로 활용

환경 진단 ⇨ **國政 순기능이 기대되나, 비판세력 준동이 우려요인**

o 교황 訪韓(8.14~18) 계기 **국가이미지 향상**은 물론 **南北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제고 · **천주교內 국정협력 분위기** 확산 효과가 기대되나

o **정구사 · 가톨릭행동** 등 종교계 비판세력들이 교황의 **濟州 · 안산 방문** 및 **쌍용차 해고자 면담** 청원활동 전개 등 **國政 흠집내기**에 **악용** 기도

* 교황의 '약자 보호' · '정치 참여' 사목지침을 왜곡, 교황 訪韓을 천주교 비판세력 활동에 정당성 부여 및 염수정 추기경 등 건전인사 위상 약화 기회로 변질 시도

건의 사항 ⇨ **전략적 홍보 · 사전 분위기 조성으로 효과 극대화**

o **교황청 · 외신** 대상으로 사전 北 주민 **인권상황 · 경제난 실태** 등 풍부한 **참고 자료**를 제공, 한반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견인하고

- **정구사** 등 비판 사제들이 **국내 인권문제**에 집착하면서 정작 **北 주민 인권**은 **외면**하는 행태 부각으로 **문제의식** 환기 병행

o 교황 訪韓시 우리의 **자유경제 · 민주주의 발전상** 및 정부 **통일비전 ·** 南北통일시 **한반도 잠재력** 부각 등을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o **7大 종단**간 **교류 · 화합 활동**을 설명, **多종교 · 多문화**를 용인하는 평화 민족임을 부각함으로써 우호적 **對韓 이미지**를 조성하고

o 천주교세가 강한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 · 중남미 국가**들과 평신도간 교류 등 **공동 이벤트**도 구상, **외교 친선증진** 기회로 활용도 검토

o **교황 경호**에도 만전을 기해 행사 **성과 퇴색** 및 **국가이미지 훼손** 방지